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종로서 기자실, 시민·사회단체

발신 : 공대위 (문의: 참여연대 이대훈 723-5300)

일자 : 1997. 11. 18

성명서

선거로 표류하는 국정,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규탄한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주민등록제도 시행 29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

1968년 11월 18일 국민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한 날로부터 오늘로 만 29년째를 맞게 되었다. 일제가 시작하고 3공화국 군부통치하에서 정착된 주민등록 제도는 이른바 문민시대인 지금에도 141가지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소유하게 됨으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국민 강제등록제도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 11월 17일 국회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민 상당수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가 국민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소지가 대단히 높고, 정보독점으로 인해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심각한 불균형상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왔다. 특히 정보주권 보호 제도나 관습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가 야기할 '경찰국가'와 같은 국민통제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기존 주민등록증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단 한가지라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제가능성을 현저하게 높인 새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오히려 주민등록법의 '개악'을 가져왔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가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서 엄청난 여파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를 신중한 검토없이 개악처리한데 대하여 깊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론 수렴없이 급박하게 통과된 이 법안은 논란중인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선거정국이 가져온 야합정치, 표류국정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서, 이처럼 중대한 국책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해버린 이번 정기국회는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전자적 방식의 국민정보관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전자주민카드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기존 주민등록제와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과 같은 기술영향평가제의 도입과, OECD 사생활보호지침의 준수, 충분한 논쟁, 그리고 여유있는 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자주민카드제의 졸속 도입은 시민불복종운동을 야기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비판과 대안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선거분위기를 틈타 통과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철회를 위해 종교, 인권,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노력으로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것이며, 전자주민카드제의 문제점과 무용성을 널리 홍보하고, 사생활보호제도의 도입과 정보주권의 확립, 기술영향평가제의 도입을 위해서 광범위한 대중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일방적으로 실시될 경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97. 11. 18.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KNCC인권센터인권위원회 YMCA 과천시시민모임 노동정보화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률소비자연맹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연대SING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정보문화센터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이상 가나다순)
전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광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전자주민카드' 악용 대책이 없다

내무부 "비용·인력 절감" 밀어붙이기... 시민단체 "개인통제 우려"

김길집전

97 쟁점법안

⑥ 주민등록법 개정안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주민카드제를 놓고 벌여온 논란은 비교적 단순하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는 정보가 한 곳에 집결될 경우 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가 쉬워지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를 해왔다. 이와 달리 내무부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비용과 인력의 절감을 위해 주민카드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개입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자칩이 내장된 카드 한장에 각종 개인정보가 수록될 경우 이런 정보 유출이 더욱 손쉬워지거나 잦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정부가 개인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게 될 경우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개인을 통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의 추진과정이 시민단체들의 이런 우려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주무부서인 내무부는 예산만 해도 2735억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을 밀실에서 추진하면서 법안마련 초기부터 대외비에 부쳤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이런 반발로 이번 내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애초 전자주민카드에 담으려던 개인정보가 크게 제한됐다. 주민등록증·초본에 수록된 정보와, 본인이 원할 경우 인감증명법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담을 수 있을 뿐 애초 내무부가 담으려 했던 도로교통법,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관련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밀려 제외됐다.

이에 따라 논란의 대상은 기본적인 행정정보만을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를 굳이 지금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인 행정정보만을 수록하는 주민카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려는 내무부의 방침에



는 앞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이 카드에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해마다 가족사항 확인을 위해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초본 1억2000만통, 인감증명 5000만통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를 주민카드로 대체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 인력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들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보기관이나 해킹에 의해 전자주민카드에 담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과 전자주민카드가 복제돼 '영동하게' 이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끝> 구본준 기자

"기체결함 연착 배상해야"

서울지법 판결

기상 이변이 아니라 비행기 고장으로 목적지에 늦게 닿았다면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한다

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서희석 부장판사)는 17일 정경일씨 등 승객 76명이 비행기 고장으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목적지에 닿은 가루다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는 승객 76명 한명당 60만원씩 지

함으로 비행기가 늦어진 만큼 항공사는 승객들이 입은 물질·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5일 270명의 승객을 태우고 자카르타공항을 떠나 서울로 오던 가루다항공 비행기가 기체 고장으로 두 차례 하하차